

기업도 비상계획 짜야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실물경기가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작년 가을 이후 위축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예상치 못하게 미국에서 테러사건이 터짐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침체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실물경기 침체는 수출부진과 설비투자 위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3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올들어 8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감소했고, PC도 22%나 줄었다.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 부진은 점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전통제품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테러 여파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회복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도 수출이 -20% 전후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중국이 아직 플러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출부진은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할 경우 작년 8.8%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금년에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5~6%에서 하반기에 4~5%로 낮췄다가, 최근에는 다시 2~3%로 낮췄다. 정부가 먼저 나서 이처럼 성장률을 하향수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설비투자 급감도 문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금년에는 설비투자를 작년에 비해 9.3%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업들이 하반기에 투자를 상반기보다 2.8% 줄일 것으로 계획하는 등 투자심리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계정을 보면 올 2/4분기중 설비투

자는 10.8% 감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원자력 설비투자를 제외하면 민간의 투자 감소율은 대폭 커진다는데 있다. 더구나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장 투자보다는 보수유지를 위한 투자에 치중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미래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업종에서 공급과잉과 채산성 악화 등 때문에 투자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그동안 우리가 비교우위를 누리왔던 업종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설비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제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2005년까지 대규모 설비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심리도 최근 위축세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가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98로 전달(98.9)보다 하락했다. 소비자 평가지수는 작년 12월 106.9에서 올 1월 104.7, 2월 103.7, 3월 101.1, 4월 101.2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5월에는 97.6으로 99년 5월 (96.4) 이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소비자 평가지수 100은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가 늘었다는 가구가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100에 못 미치면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가 5월 이후엔 계속 100이하로 최근 소비자들이 소비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6개월 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102.3으로 전달의 102.5보다 조금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콜금리 인하를 단행해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증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설비투자도 회복되지 못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체질 강화다. 이것이야말로 대외여건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를 회복케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정책당국은 경기부양 등 미봉책에 신경쓰기 보다는 근본 문제 해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근거해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시구조조정 체제의 정착은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부실기업을 조기발견하고 채권금융기관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산업재편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산업의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후발국들이 전통제조업에서 대대적인 설비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전통제조업은 하루빨리 고부가가치 쪽으로 재정비하고, 동시에 유망산업의 발굴과 투자에 힘을 결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경제성장률 등 단기적인 경기지표에만 집착해 경기부양에만 매달린다가나 단기적인 경기흐름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경제의 장래도 없을 것이다.

또 기업들은 2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공황이 엄습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실있는 경영이다. 현재 운영중인 정부와 채권단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서 부실징후 기업의 중요한 판정 기준의 하나가 이자보상배율이다. 이는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인데 이것이 1이 안되는 기업, 다시 말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방침으로 돼 있다. 올 1/4분기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중 38.2%의 기업이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아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제조업체들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5로 미국이나 일본의 3.5 정도보다 훨씬 낮은 것도 국내기업이 재무구조를 더욱 개선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 자금난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BB급 이하인 투기등급 기업들의 경우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신용등급을 높히는 것과 함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갖추어 유연한 상품전략을 쓸 필요도 있다. 한 가지 브랜드에만 매달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상품개발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시대조류 변화에 편승한 합리적인 전략이다.